

## 주관적 웰빙과 소득

: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소득의 한계성 및 상대성 검증\*

Subject Well-being and Income

: Testing the Relativity of Income in the Context of Seoul City

서인석\*\* · 우창빈\*\*\* · 기영화\*\*\*\*

Seo, Inseok · Woo, Changbin · Kee, Youngwha

### ■ 목 차 ■

- I. 문제의 제기
- II. 소득과 웰빙에 대한 이론적 접근
- III. 연구설계
- IV. 분석결과
-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진실로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 라는 다소 도발적인 질문에 답하고자 Easterlin의 가설을 접목하여 검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서울시는 주관적 웰빙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연봉이 필요하고, 소득편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으며, 소득이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을 구분하여 정책 및 제도적 보완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결과가 2012년 횡단면적 자료에 의한 것이기에 더 많은 자료를 통해 확인될 필요가 있다. 허나 소득격차가 서울시 내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이 서울시민들의 주관적웰빙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지속되어야 하며, 미약하게나마 정책적 타당성은 본 연구결과로 뒷받침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재원(교육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SSK사업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3S1A3A2054622)

\*\* 숭실대 SSK 커뮤니티웰빙 연구단 전임연구원(주저자)

\*\*\* 숭실대 SSK 커뮤니티웰빙 연구단 전임연구원(공동저자)

\*\*\*\* 숭실대학교 평생교육과(교신저자)

논문 접수일: 2015. 1. 28, 심사기간(1차): 2015. 1. 28 ~ 2015. 2. 27, 게재확정일: 2015. 2. 27

□ 주제어: Easterlin 패러독스, 소득의 한계효용, 웰빙의 상대성

This study attempts to test the so-called “Easterlin Paradox”, simply, that money does not buy happiness, in the context of Seoul city, Korea. Using samples from the Seoul Survey, the study found that higher income is correlated with higher level of subject well-being of Seoul citizens, with the divides appearing geographically among the 25 “Gu” areas. The results suggest that public policy should focus more on bridging the divides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especially those in rich areas and poor ones. As this study uses only 2012 survey data, some methodological cautions need to be mentioned for future studies, and longitudinal data will be necessary to resolve those limitations.

□ Keywords: Easterlin Paradox, Marginal Utility of Income, Relativity of Subject Well-being

## I. 문제의 제기

인간 삶에 돈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 지속적인 부의 확충이 삶의 복합적인 요소들을 해결할 수 있나? 진실로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 최근 ‘인간다운 삶’과 경제적 성장 또는 소득수준 증대와의 관계에 대한 논쟁은 많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화두(話頭)가 되고 있다. 구교준 외(2014: 317-318)는 이와 같은 논지를 지적하는데, 그는 Easterlin의 역설과 국외기관들의 행복이나 웰빙조사에 기초하여 높은 소득수준이 반드시 높은 행복수준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한다.

소득이 행복에 있어 중요하다라는 인식은 1960년대 이후 지배하였던 생산중심 패러다임과 무관하지 않다. 그 시기 빈곤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국제사회 이슈로 부각되면서 경제적 성장, 즉 GDP를 한 사회의 발전상태를 나타내거나 정부정책을 평가하는 지표로(기영화 외, 2013: 2) 강조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지배하에 많은 국가들은 경제적 성장을 필두로 개인 및 지역 소득을 중시하게 되었고, 계층간 불균형 문제나 지역격차의 문제는 그에 따른 필연이었다. 핵심은 다양한 사회문제에도 불구하고 ‘경제, 사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은 소득이다’라는 ‘신자유주의’ 또는 물질주의가 여전히 강조되고 있어 현재에도 소득은 행복 또는 삶의 만족에 중요한 대상이라는 점이다. 물론, 학계 또는 연구를 통해서 물질주의적

관점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페미니즘, 개발도상국가 연구 등은 경제지표가 삶의 질을 보여주는데 있어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2000년대 전후로 나타난 지속가능한 발전이나 웰빙, 행복, 삶의 질 등의 개념들은 더 이상 소득이 전부가 아님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Easterlin처럼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소득과 행복과의 관계(Easterlin, 1974; Easterlin, 2004; Stevenson & Wolfers, 2013)나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이 바라는 소득의 한계치(Kahneman & Deaton, 2010)를 밝히려는 연구들이 지속되고 있다. 나아가, Easterlin의 관점을 비판하는 연구결과들<sup>1)</sup>에 대해서 절대빈곤에 해당하는 국가들의 자료로부터 나타난 편의(bias)임을 주장하면서 소득이 줄 수 있는 행복이나 주관적 웰빙은 한계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국가 간 비교연구에서는 평균소득 증가가 평균적인 삶의 만족도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사회가 절대빈곤수준을 벗어났다면 소득이 낮은 나라라고 해서 소득이 높은 나라에 비해 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구교준 외, 2014: 318).

그렇지만, 소득과 주관적 웰빙 사이의 논쟁은 현재 진행중이며, 국가단위, 지역단위, 개인 수준 등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강조될 필요가 있다. 즉, 많은 연구결과가 대부분 국가 단위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지만, 지역단위 또는 도시단위를 중심으로 연구들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소득이 줄 수 있는 주관적 웰빙의 최대치가 절대적인 것인지, 아니면 지역이나 국가가 가지고 있는 소득격차(ex: 소득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로 인한 상대적인 것인지 확인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 만일 상대적인 박탈감이 소득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라면 그때는 지역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안보다 지역 내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이 지역내 시민들의 주관적웰빙을 고양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선상에서 본 연구의 목적을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가내 단위를 대상으로 이뤄지던 주관적 웰빙과 소득의 연구를 지역단위를 대상으로 진행해보고자 한다. 즉, 서울시라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서울시 수준에서 주관적 웰빙이 수렴되는 지점에서 평균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을 시도함과 동시에 자치구 별로 그와 같은 수렴점에서의 평균소득이 어느 정도인지도 함께 분석한다. 둘째, 지역소득수준에 따라 평균소득이 높아지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적 박탈감의해 평균소득이 변화하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지역평균소득액과 도출된 만족의 한계평균소득, 그리고 소득편차와 도출된 만족의 한계평균소득 간의 상관성이 있는지 분석을 시도한다.

1) 많은 연구들은 여전히 통계결과 소득수준은 높아질수록 지속적으로 행복수준이 높아졌음을 국제자료들에 기초하여 분석한 후 Easterlin의 관점을 의구심을 제시하기도 한다(Di Tella et al., 2003; 이양호 외, 2013: 28).

## II. 소득과 웰빙에 대한 이론적 접근

### 1. 경제적 접근방식으로써 웰빙: 빈곤으로부터의 탈출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은 GDP를 ‘발전’ 또는 ‘진보’를 측정하는 척도로 간주해왔다(김운태, 2009: 77). 즉,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경제성장을 목표로 급속한 소득증대에(구교준 외, 2014: 317) 집중해왔는데, 이는 전쟁이후 전세계적으로 만연한 빈곤의 문제 때문이었다. 이러한 빈곤문제는 냉전시기 미국의 대외원조정책 방향으로 투영되었고, 동아시아 또는 남아메리카 등지의 많은 신생독립국들은 국가시스템이나 제도를 구현하고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했다.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큰 사안이었던 시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굶지 않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에 국가성장은 GDP로 설정되었으며,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 저개발국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논리는 적용되고 있다.

경제적 측면으로부터의 웰빙은 생산중심의 패러다임으로부터 많은 문제들을 불러왔는데, 지역간 문제, 소득격차 등의 계층화 등의 사회구조화가 그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서구사회의 관점 역시 복지제정의 악화와 이와 맞물린 신자유주의 팽배와 함께 저개발국가로부터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오히려 그와 같은 문제는 경제적 성장을 이룬 뒤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는 논리가 더욱 쉽게 수용되어왔다. 특히, 국가간 무역에 있어서 자유주의의 경제논리는 1990년 이후 국가내 구성원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비춰지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장논리는 국가패러다임을 넘어서 국가내 구성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고, 돈이 최고의 가치로 부여되는 물질만능주의적 상황이 주도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시킴으로써 정신적인 가치는 등한시되고, 개인이나 공동체적 가치가 잘 고려되지 못하는 상황을 양산해내고 있다<sup>2)</sup>.

물론, 현재에도 아프리카 등지와 많은 약소국가들은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이 최상의 가치로 여겨지는 것이 그들에게는 이상하지 않다. 특히, 일부학자들을 중심으로 오히려 많은 연구들에서 주관적 웰빙과 소득 간에는 비례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여전히 세계국가 대부분은 빈곤상태이며, 소득수준을 해소하는 것이 주관적 웰빙과 행복을 높이는 데 있어 가장 빠른 방법임을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2) 정신질환의 유형은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자살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처럼 정신병 환자는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어떤 국가에서든지 절대빈곤의 수준을 벗어난 시점부터는 경제적 성장이 더 이상 주관적 웰빙이나 행복을 높여주기는 어렵다는데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이나 ‘행복’과 같은 학술적 관점을 통해서 경제적 성장이나 경제적 발전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시점에서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강조한다는데 있다. 따라서, 웰빙을 더 이상 경제적 접근방식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탈물질적·정신적 가치를 확보하려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웰빙을 다루는데 있어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게 되면 심리적 안녕 및 주관적 만족과 같은 심리적 요소가 더욱 부각되게 된다. 이러한 논점에서 웰빙에 대한 다른 접근방식으로써 Easterlin의 역설에 대한 논의와 논쟁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 웰빙에 대한 다른 접근: Easterlin's Paradox 논의

Easterlin은 1961년 코호트 조사연구를 시작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많은 연구들을 진행하였다(Pampl & Peters, 1995). 특히, 사회학을 중심으로 행동을 연구하던 그의 연구에서 소득과 행복은 지속적인 선형관계가 아님을 확인하고 주관적 웰빙이나 행복 등에 있어서 소득은 한계효용이 나타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즉, 소득과 행복의 관계는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한계효용이 감소하는 곡선의(curvilinear) 형태를 지닌다는 것이다(Diener, Sandvik, Seidlitz, and Diener, 1993: 204; Diener and Biswas-Diener, 2002: 119). 이는 수확체증의 법칙(law of diminishing returns)이 주관적 웰빙과 소득 사이에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Veenhoven, 1989: 15-18; Veenhoven, 1991: 10; Veenhoven, 1993: 127).

Easterlin 및 그를 지지한 학자들의 연구들은 국가들을 비교함에 의해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였는데, 소득과 주관적 웰빙 사이에 관계는 한계효용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고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주관적 웰빙은 차츰 상승하는 비율이 줄어들다가 일정 지점에 수렴하는 결과를 보였다. 게다가, 높은 임금은 개발도상국에서는 행복을 높이고 있었으나, 부유국(rich countries)에서는 그 효과가 작았다(Frey and Stutzer, 2002: 90). 초창기 경제 성장의 관점에서 경제적 개발이라는 문구(국민소득으로 측정된)는 큰 만족감과 행복을 주었을지라도, 경제적 성장이 상당수준 달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인간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Inglehart, 1997: 61; Inglehart, 2000: 219). 한편, 이러한 소득과 주관적 웰빙간의 관계는 국가간 차이 뿐만아니라 지역간 차이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H1: 소득수준이 빈곤한 지역이 부유한 지역에 비해 소득에 따라 충족되는 주관적웰빙의 수준은 더 높을 것이다.*

H2: 소득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웰빙이 충족되는 지점에서 주관적 웰빙지수의 비율은 감소할 것이다.

나아가, 개인의 주관적 효용은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와 같은 삶의 조건하에서 절대적 수준 이라기보다는 상대적 수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구교준 외, 2014: 320) 주장 역시 Easterlin의 관점을 지지한다. 구교준 외(2014: 320)는 Duesenberry(1949)의 관점을 차용해 이를 설명하는데, 그는 개인의 효용은 자기 자신의 절대적 소비수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 소비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즉, 사회의 소득격차 또는 지역내 소득격차 수준이 현저하거나 개인의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소득도 비슷하게 증가하면 개인의 주관적 효용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주관적 효용은 정체되고 소득효용의 한계는 증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특정 국가의 사회환경 하에서 상대적 소득과 상대적 지위가 개선되지 못하였다면 지속적인 소득증가 하에서도 주관적 웰빙은 고정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지역내에서도 고려될 수 있는데, 각 지역이 가진 GDP와 개인의 GDP 수준을 비교하여 그 상관성을 추론한다면 주변여건이 가진 특성이 개인 소득의 효용한계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Hirsch(1976)의 ‘지위재(positional goods)’와 같은 용어에서 유래한 ‘지위의 쳃바퀴효과(positional treadmill)’는 그 근원을 거슬러 오르면, Veblen(1899)의 ‘과시적 소비(conspicuous consumption)’, Duesenberry(1949)의 ‘상대소득 가설(relative income hypothesis)’에서 비롯하였다. 남과의 비교를 통해 행복을 느끼고, “소득 자체보다는 사회적 지위를 추구”하기 때문에(Layard, 2005), 금액으로 평가되는 절대소득(absolute income)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한 상대소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Clark & Oswald, 1996). 상대적인 비교를 하지 않는 것이 쉽지 않고, 절대소득이 늘어나도 남들과 비교한 상대소득은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결국 행복이 증가하지 않는 쳃바퀴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다소 거칠게 표현하면,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처럼,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보다 많이 가진 남과 비교하면 행복하지 않는 것이다. 비교하면 행복이 줄어드는데, 그러면 누구와 비교하느냐, 어떤 기준 혹은 준거(reference)를 두어 비교하고 자신을 평가하는지가 문제이다. 이에 대해 특히, 주위사람, 이웃의 소득이 올라가면 자신의 행복수준이 저하된다는 실증 연구(Luttmer, 2005)가 있다. 사회 정책적으로 더 의미가 있는 것은 후자인 ‘지위의 쳃바퀴효과’인데, 특히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소위 과시적 소비는 행복을 저해하는 해로운 효과가 있는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ies)를 만들어 낸다(Frank, 1999; 2012).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목적이 큰 아주 값비싼 고급차량과 같은 재화들은 이를 가지지 못한 주위 사람들의 행복을

낮출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와 비슷한 목적의 또 다른 재화를 사고 싶은 욕구를 부채질한다. 이렇게 필요 이상 비싼 상품들, 사치재, 나아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지위재는 남들 또한 경쟁적으로 사고 싶어지게 만들어 사회 전체적으로 행복을 낮추므로, 마치 공해와 같은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만든다고 할 수 있다.

*H3: 주관적 웰빙에 대한 소득의 한계효용은 지역내 구성원들의 상대적 소득격차와(ex: 소득편차)과 상관성이 있을 것이다*

### 3. 소득과 주관적 웰빙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소득과 주관적 웰빙 사이의 관계는 Easterlin의 1974년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연구 이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에는 소득이 주관적 웰빙에 어느 정도의 효용을 줄 수 있는지, 그 한계는 어디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러한 선상에서 가장 근접한 연구들인 Easterlin(2004), Weber(2005), Kahneman & Deaton(2010), Stevenson & Wolfers(2013)의 연구를 통해 선행연구들의 경향 및 초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Easterlin(2004)은 소득의 감소된 한계효용(diminishing marginal utility of income)이라는 가설을 제시하고 검증을 시도하였다. 그는 국가간 국가내 모두에서 검증을 시도하였다. 가설에 따라 소득의 증가 후 시간이 지나면 주관적 웰빙은 높아지고, 이러한 횡단면의 관계성은 국가 간 뿐만 아니라 국가내부에서도 소득과 주관적 웰빙(한계효용)의 관계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부분이었다. 평가된 국가간 및 국가내 결과 모두 서로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다(mutually supportive). 즉, 국가내의 소득과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성 역시 유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Easterlin은 국가내 자료가 미국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여타 다른 국가(예: 소득수준이 매우 낮은 곳)에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음을 언급하였다. 소득과 주관적 웰빙 사이의 가설은 연구자가 확신하기보다는 다양한 국가내에서 검증하여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소득과 주관적 웰빙 사이의 가설관계는 다양한 국가맥락에서 더 많은 검증이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였다.

Weber(2005)는 소득과 주관적 웰빙간의 관계를 경험적 검증차원을 넘어서 수학적 이론모형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는 가계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소득의 한계가치가 감소하는 방식을 개발하였다. 감소된 소득의 한계가치에 대한 의미로써 첫 번째는 간접적 무차별곡선의 표면의 다른 자원을 통해 금전적 소득의 대체 감소 한계율을 도출한 점이다. 두 번째는 다

른 자원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화폐가치로 전환하고 측정된 값이 높아짐에 따라 금전 및 화폐를 통한 한계가치는 감소한다는 점이였다. 셋째, 가계소득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은 다른 요소들의 한계가치를 일정하게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이론 논리적 결과는 소득의 증가가 인간의 욕구를 증진하기 위한 다른 요건들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의 가치는 한계가 존재함을 증명한다. 이러한 모형을 구축하고 설명하는 방식은 경험적 자료를 통해 이루어지던 소득과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성에 대해 보다 인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물론, 여전히 경험적 검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Easterlin의 지적처럼 이는 시간에 따라서, 국가의 맥락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많은 경험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표 1> 소득과 주관적 웰빙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자료	연구방법
Easterlin (1974)	소득과 행복간의 관계 경험적 검증	30개국(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프리카 대상)	1946-1970년까지 30개국의 개인별 행복조사자료	누적평균 웰빙지수와 소득구간의 분포도
Easterlin (2004)	소득과 행복간의 관계 경험적 검증	1960년대 횡단면 14개국, 일본 1960과 1987 비교	Veenhoven에 의해 게재된 논문들의 원자료로 1960년대 1인당 GNP와 행복지수자료, 그리고 일본의 초기 1960 및 1987년 1인당 GNP와 행복지수자료	평균 행복지수와 1인당 GNP 간의 분포
Weber (2005)	소득의 한계가치 경험적 검증	-	-	수학논리에 의한 이론모형의 도출 및 그래프를 활용한 분석
Kahneman & Deaton(2010)	소득에 의한 주관적 웰빙의 한계 수렴도	미국인 45만명	Gallup Organization에 의해 수행된 Gallup-Healthways Well-Being Index 조사자료	누적평균 웰빙지수와 소득구간의 분포도
Choudhary et al.(2012)	행복과 소득의 곡선적 관계에 대한 이론모형의 도출	-	-	수학논리에 의한 이론모형의 도출 및 분석
Stevenson & Wolfers(2013)	부유국과 빈곤국 간 소득에 따른 주관적 웰빙의 격차 수준	155개 국가	Gallup World Poll에서 조사된 2008년에서 2012년까지의 4년간 155개국 자료	누적소득과 누적만족도 간 분포도, 수정된 Easterlin 가설에 대한 회귀분석



Kahneman & Deaton(2010)은 높은 소득이 삶에 대한 평가수준은 높일 수 있지만 감정적 차원의 웰빙은 높이지 못할 수 있음을 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GHWBI(Gallup-Healthways Well-Being Index)의 조사자료(65만명)를 통해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때 이들은 감정적 웰빙(emotional well-being)과 삶의 평가(life evaluation)를 각각 구분하여 연구를 시행하였는데, 이는 감정적 웰빙(emotional well-being)과 삶의 평가(life evaluation) 사이의 관련성을 가구소득 차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연구결과, 소득의 증가는 삶의 평가를 높일 수 있었으나, 감정적 웰빙(만족)의 한계는 매년 \$75,000 이하에서 수렴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이 주관적 웰빙, 특히 만족 및 행복과 관련된 개인적 요소에는 곡선(curve linear)의 형태를 띠고, 한계점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높은 소득의 경우 높은 행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낮은 소득의 경우 삶에 대한 평가와 행복 모두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을 통계결과를 통해 지적하고 있다.

Stevenson & Wolfers(2013) 역시 주관적 웰빙과 소득의 관계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는 많은 학자들이 한때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높은 소득은 더 이상 주관적 웰빙과 관계를 가지지 못한다고 언급한다. 이들은 이러한 주장을 부유국과 빈곤국을 비교하고, 부유층과 저소득층을 비교하여 가설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기본욕구”의 다양한 정의와 웰빙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다층적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분석결과는 이 주장을 지지하지 않았다. 웰빙과 소득사이의 관계는 로그선형의 관계이나 소득이 증대한다고 해서 비율이 감소하지 못했다.

요컨대, 각 연구들은 소득과 만족도 간의 관계를 통계자료를 통해 검증하고,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각 연구들은 각각의 연구가설을 통해 Easterlin 역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선행연구들은 국가를 연구대상으로 하거나, 하나의 국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렇지만, 최근 많은 논의들이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역단위의 경제적 활성화 및 주관적 웰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만큼 연구의 대상을 국가내의 지역단위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지역 상호간에도 많은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시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며, 서울시 자치구라는 하위지역까지 연구범위로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 범위의 확장은 지역단위로 Easterlin의 가설을 확장하고 주관적 웰빙을 지역단위수준과 연결짓는 시론적 연구로써 의의가 있다.

### Ⅲ. 연구설계

#### 1. 연구기설 및 방법

본 연구는 소득구간에 행복지수의 누적평균값을 구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우선, 조사대상 전체의 소득구간별로 5개 행복지수 지표 누적평균값을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값은 각 소득구간의 상승에 따라 행복지수 지표의 누적평균값 간의 선형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소득구간이 증가함에 따라 변화하는 주관적웰빙(행복지수)의 평균값, 그리고 소득이 증가하는데도 행복지수가 변화하지 않는 수렴지점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둘째, 각 자치구별 예산과 수렴 소득(수렴된 소득구간) 간의 상관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셋째, 각 자치구별 예산과 소득 편차 간의 상관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sup>3)</sup>. 마지막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하위1위; 하위1위~하위5위)과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상위1위; 상위1위~상위5위)에 대해 각기 소득과 만족간의 회귀분석을 통해 둘 간의 회귀계수( $B$ )를(기울기) 비교하고자 하였다<sup>4)</sup>.

<표 2> 연구기설과 연구방법

연구기설		연구방법	분석단위
H1	소득수준과 주관적웰빙의 관계에서 하위5위 기울기는 상위5위 기울기에 비해 높음	회귀분석 및 기울기 비교	개인
H2	소득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웰빙이 충족되는 지점에서 주관적 웰빙지수의 비율은 감소할 것이다.	소득구간 평균	개인
H3	소득의 한계효용(수렴구간)과 구성원 소득격차(소득편차)	Spearman 상관분석	지역 (자치구)

3) 상관관계 계수의 해석은 Rea & Parker(2005)의 관점을 차용하였다. 그들은 ① 0.0~0.1 거의 관계없음을 의미하며, ② 둘째 0.1~0.2 약한 양의 상관관계, ③ 0.2~0.4 보통의 양의 상관관계를, ④ 0.4~0.6 비교적 강한 양의 상관관계, ⑤ 0.6~0.8 강한 양의 관계, ⑥ 0.8~1.0 매우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의미한다는 기준치를 제시하였다.

4) 만일 회귀계수가 상대적으로 낮다면, 소득에 의해 충족되는 주관적 웰빙이 높아지지는 정도가 낮은 것이다. 반면, 회귀계수가 상대적으로 높다면, 소득에 의해 충족되는 주관적 웰빙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 간의 차이가 커질수록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과 웰빙간 관계모형은 상이하다고 판단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잘 못하는 지역의 회귀계수가 부자동네에 비해 높다면 이는 소득이 주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 2. 분석지표 및 자료

본 연구의 자료로 “서울시 도시정책 지표조사 2012”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 조사는 2012년 10월부터 11월까지 조사된 자료로써 ‘e-서울통계’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2만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 약 4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는 가구조사와 가구원조사로 구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가구원 조사자료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가구원 조사자료의 경우 만족도 조사와 소득수준에 대한 조사자료가 함께 제시되어 있다. 가구조사는 20,000가구가 조사대상이며, 가구원은 49,758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이하 <표 3>는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3> 응답자의 일반특성<sup>5)</sup>

인적요인	구성요소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24,034	48.3
	여성	25,724	51.7
연령	10대	4,118	8.3
	20대	7,436	14.9
	30대	9,018	18.1
	40대	12,030	24.2
	50대	9,664	19.4
	60대 이상	7,492	15.1
학력	중학교 이하	8,371	16.8
	고등학교 이하	16,483	33.1
	대졸 이하	24,336	48.9
	대학원 이상	568	1.1
개인소득	100만원 미만	638	1.3
	100-200만원 미만	2,671	5.4
	200-300만원 미만	5,815	11.7
	300-400만원 미만	12,831	25.8
	400-500만원 미만	12,749	25.6
	500만원 이상	15,054	30.3

5) 서울도시정책지표조사가 많은 표본과 지역별 할당, 성별, 학력, 연령 등 상당히 균형적으로 배분되어 자료조사를 수행하고 있어 대표성이 높은 것이라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개인소득 차원에서 500만원 이상이 30.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소득 부분에서의 편중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특히, 웰빙과 소득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점에서 향후 전체 서울시 소득분포와 비중을 통해 자료의 대표성을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인적요인	구성요소	빈도(명)	비율(%)
혼인상태	기혼	32,586	65.5
	미혼	13,616	27.4
	이혼/별거	1,395	2.8
	사별	2,161	4.3
거주지	종로구	1,203	2.4
	중구	1,090	2.2
	용산구	1,578	3.2
	성동구	1,656	3.3
	광진구	1,977	4.0
	동대문구	1,484	3.0
	중랑구	2,191	4.4
	성북구	2,164	4.3
	강북구	1,979	4.0
	도봉구	1,898	3.8
	노원구	2,464	5.0
	은평구	2,186	4.4
	서대문구	1,704	3.4
	마포구	2,006	4.0
	양천구	2,155	4.3
	강서구	2,367	4.8
	구로구	2,286	4.6
	금천구	1,666	3.3
	영등포구	2,106	4.2
	동작구	2,175	4.4
	관악구	2,483	5.0
	서초구	1,978	4.0
	강남구	2,220	4.5
송파구	2,645	5.3	
강동구	2,097	4.2	

자료: 2012 서울도시정책지표조사(2013)

성별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비슷하였으며, 연령의 경우 역시 40대가 24%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으나(10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15% 안팎의 비중을 보이고 있어 분포가 고른 편이다. 학력의 경우 대졸이하가 가장 많은 48.9%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대학원 이상은 1.1%로 적은 비중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편중은 서울시의 전체 학력수준이 높음에 따라 나타난 할당 표본의 결과이다. 혼인상태의 경우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대략 2배정도 많았다. 거주지의 경우 자치구별로 3%~4% 사이에서 고르게 분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전체적으로, 본 연구의 자료인 서울시정책지표조사 결과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표본 할당추출 조사방식을 적용하여 수집한 것으로써 서울시민을 상당히 잘 반영하는 자료라고 판단해볼 수 있다. 이에 통계분석자료로 활용하고 분석을 시도하였다.

## IV. 분석결과

### 1. 주관적 웰빙의 소득 한계효용 분석: 서울시 전체

<표 4>은 행복지수와 소득구간별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월에 100만원 미만의 수입을 가진 대상자는 638명으로 1.3%, 200만원 미만의 수입을 가진 대상자는 2671명으로 5.4%, 300만원 미만의 수입을 가진 대상자는 5815명으로 11.7%, 400만원 미만의 수입을 가진 대상자는 12831명으로 25.8%, 500만원 미만의 수입을 가진 대상자는 12749명으로 25.6%, 500이상 미만의 수입을 가진 대상자는 15054명으로 30.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주관적 웰빙의 경우를 살펴보면 자신의 건강상태 평균은 최소 5.39에서 최대 7.11까지 소득에 의해 상승하였다. 자신의 재정상태 평균은 최소 4.59에서 최대 6.08까지 소득에 의해 상승하였다. 주위 친지, 친구와의 관계 평균은 최소 5.51에서 최대 6.93까지 소득에 의해 상승하였다. 가정생활 평균은 최소 5.56에서 최대 7.04까지 소득에 의해 상승하였으며, 사회생활 평균은 최소 5.46에서 최대 6.86까지 소득에 의해 상승하였다. 주관적 웰빙을 표출하는 5개 지표 모두가 상승폭에는 차이가 있지만 소득구간에 의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소득구간 주관적웰빙(행복지수)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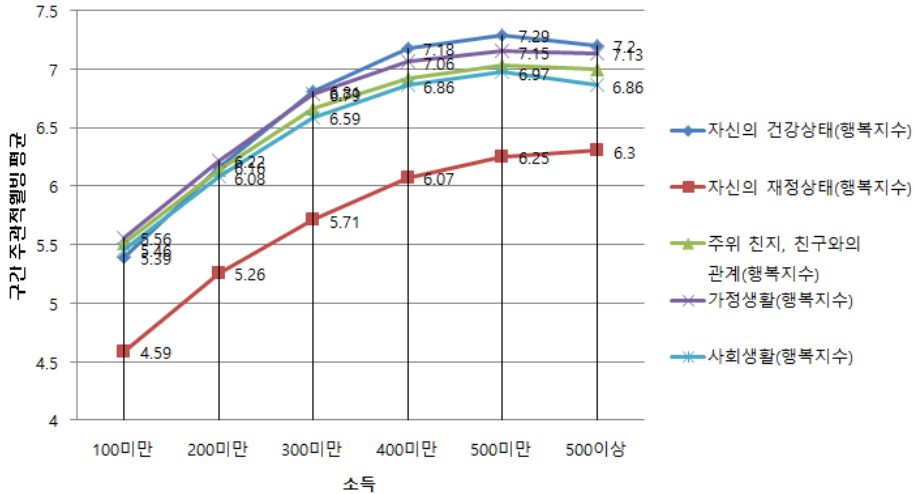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행복지수 1인소득	구간별 주관적웰빙 누적평균값(점수)					자료값 (N)
	자신의 건강상태	자신의 재정상태	주위 친지, 친구와의 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	원자료
100미만	5.39	4.59	5.51	5.56	5.46	638
200미만	6.16	5.26	6.14	6.22	6.08	2671
300미만	6.81	5.71	6.66	6.79	6.59	5815
400미만	7.18	6.07	6.92	7.06	6.86	12831
500미만	7.29	6.25	7.03	7.15	6.97	12749
500이상	7.2	6.3	7	7.13	6.86	15054

<그림 1>은 상기의 결과를 토대로 비교 및 소득수렴점을 보다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 재정상태에 대한 주관적웰빙이 전체적으로 다른 지표들에 의해 평균 1점정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재정상태 자체에 대해 서울시민들은 다른 지표들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 판단해볼 수 있다. 다른 4가지 지표들은 기울기가 작은 차이들은 있으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 보여진다. 또한, 5가지 지표 모두 400미만을 기점으로 기울기가 다소 낮아졌으며, 500만원을 기준으로 거의 상승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400만원에 근접한 소득을 지닌 서울시민들에게는 주관적웰빙에 대한 소득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더 엄밀하게 본다면 500만원에 근접하면 더 이상 주관적 웰빙은 5개 지표 모두에서 거의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 즉, 500미만이 수렴점이기에 500만원을 넘는다고 해도 더 이상 소득으로 인한 서울시민의 주관적 웰빙은 의미가 없어지며(주관적 웰빙의 수렴점 최대 7.1점, 다른 요소들이 충족될 때 비로소 높아질 수 있게 된다. 본 연구가 1인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1인의 연소득<sup>6)</sup>은 5400만원이 된다.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Kahneman & Deaton(2010)의 연구에서 7,500\$(U.S.)가 연가구 소득이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판단해볼 수 있다(주관적 웰빙의 수렴점 7.5점). 물론, 여기서 조심스러운 해석이 필요하다. 이는 응답자가 비록 1인 개인의 관점에서 응답하였다고 보통 자신의 가구를 기준으로 판단했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맞벌이가 아닌 경우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1인 기준 연 5400만원의 수렴점은 그 자체로 한 가구의 주관적 웰빙 수렴점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분명히 고려해야 할 것은 서울시민들이 소득에 의해 충족되는 주관적 웰빙의 소득수준은 미국인에 비해 높으나, 그 충족수준은 낮았다는 것이다(최대 지점을 비교할 때 0.4점 낮음).

6) 4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이므로 450만원을 기준으로 추정하였다.

<그림 1> 소득구간 주관적웰빙의 누적평균 도표



이러한 결과는 지방행정서비스를 담당해야 하는 서울시 및 자치구에 큰 시사점을 줄 수 있는데, 경제적 수입은 낮지 않으면서 경제적 소득 이외의 요소들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를 구현해야 한다는 점이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만, 서울시가 단순히 소득과 경제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경우 시민들이 바라는 욕구와 상충될 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분석결과는 보여준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서울시 자치구 별로 차이가 나는지 분석을 시도하고, 이러한 차이가 혹 지역의 경제수준에 따라 상이해지는지<sup>7)</sup> 살펴보고자 한다.

## 2. 주관적 웰빙의 지역격차 및 상대적 분석: 서울시 자치구별

<표 5>는 서울시 전체의 소득구간을 도출한 방법을 개별 자치구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도출된 값이다. 25개 자치구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소득평균을 가진 지역은 용산구였으며,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은평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가장 낮은 소득평균을 나타낸 지역은 동대문구였으며, 중구, 강동구, 강서구, 강북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편차가 가장 심했던 곳은 중구였으며, 강동구, 종로구가 그 뒤를 이었다. 주관적웰빙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강남구였으며, 7점이상을 나타낸 지역은 강남구를 포함하여 송파구, 서초구, 서대문구, 강서구 등으로 나타났다. 수렴구간의 경우 소득이 수렴되지 않았던 자치구는 송파구, 금천구, 관악구, 종로구, 양천구, 강서구, 강동구였다. 이들은 소득이 500만원 미만에서는 주관적웰빙이 충족

7) 선행연구들은 부유한 대상지역과 빈곤한 대상지역에서 소득의 영향이 달라진다고 언급하였다.

되지 못하였다. 이에반해, 용산구, 서초구, 은평구, 광진구, 마포구, 성동구, 도봉구, 노원구는 300만원 미만을 기점으로 소득이 주관적웰빙을 더 이상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표 5> 서울시 자치구별 각각의 소득편차, 소득평균, 수렴구간

자치구	소득편차	소득평균	수렴구간 <sup>8)</sup>	주관적웰빙 (5개평균)
용산구(170)	1.15	5.08	3	6.672
강남구(680)	1.017	5	5	7.299
송파구(710)	1.099	4.94	6	7.143
서초구(650)	1.034	4.89	3	7.206
은평구(380)	1.168	4.73	3	6.725
광진구	1.201	4.68	3	6.686
금천구	1.177	4.67	6	6.888
관악구	1.266	4.65	6	6.819
영등포구	1.063	4.63	4	6.698
구로구	1.211	4.6	4	6.848
마포구	1.259	4.59	3	6.809
동작구	1.188	4.57	4	6.905
성동구	1.268	4.56	3	6.109
도봉구	1.177	4.55	3	6.778
종로구	1.472	4.55	6	6.837
중랑구	1.205	4.53	4	6.37
노원구	1.097	4.52	3	6.729
성북구	1.239	4.5	5	6.931
서대문구	1.223	4.49	4	7.159
양천구	1.319	4.48	6	6.999
강북구(305)	1.213	4.47	4	6.896
강서구(500)	1.379	4.41	6	7.122
강동구(740)	1.449	4.33	6	6.051
중구(140)	1.494	4.12	5	6.981
동대문구(230)	1.458	3.93	4	6.275

8) 수렴지점 각각에 표시한 1에서 6까지 숫자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100미만), 2(100이상~200미만), 3(200이상~300미만), 4(300이상~400미만), 5(400이상~500미만), 6(600이상)으로 측정되었다(단위: 만원).



자치구별 도출된 수렴지점을 기초로 소득평균, 소득편차와의 상관성에 대해 확인한 것 <표 6>의 결과이다. 본 연구가 상대적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에 대한 더 많은 욕구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하는 결과는 소득편차와 소득지점과의 상관관계 결과이다. 스피어만 상관관계가 0.409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이는 둘 간에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Rea & Parker, 2005). 따라서, 지역내의 구성원 각각의 절대적 소득 수준보다는 그 지역내에서 자신이 어느 정도 수입이 있는가 하는 상대적 소득이 높을수록 수렴지점은 낮아질 수 있다. 즉, 절대적 소득수준 보다 소득편차가 낮은 지역일수록 소득이 주는 주관적웰빙은 낮아진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표 6> 상관계수 분석결과<sup>9)</sup>

		소득편차	수렴지점	소득평균
Spearman의 rho	소득편차	1.000	.409**	-.741***
	수렴지점		1.000	-.267
	소득평균			1.000

\*:p<0.1; \*\*:p<0.05; \*\*\*:p<0.001

상관계수를 통해 상대적 소득격차를 확인해보았는데, 소득격차 뿐만 아니라 지역자체의 소득수준에 따라 한계효용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즉, 선행연구들은 선진국과 달리 빈곤국의 경우는 소득이 주는 주관적 웰빙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부유국과 빈곤국은 소득과 주관적웰빙의 관계 강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득평균 상위 5개 자치구(용산구,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은평구)와 하위5개 자치구(강북구, 강서구, 강동구, 중구, 동대문구)를 구분하여 각각 소득과 주관적웰빙 간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회귀계수의 비교를 통해 차이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한편, 소득편차와 소득평균 간에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차이는 매우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의 편차가 낮은 지역에서 소득평균이 높았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잘 사는 지역에 있는 구성원들이 또한 소득격차가 낮았음을 의미한다. 즉, 강남구나 서초구와 같이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은 상대적 소득격차도 낮았다는 것이다. 강남구나 서초구는 주택획득 비용(부동산 가격)이 매우 높아 소득수준이 많은 인원들이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

9) 표본수가 30개 미만인 상태에서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여 비모수 추정인 Spearman 상관관계를 활용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관련성에 대해 피어슨 상관관계 수치 역시 확인해보았는데, 피어슨 상관계수에서는 소득편차와 수렴지점은 0.414(0.05>p), 소득편차와 소득평균은 -0.773(0.000>p)으로 더 높은 관계수치를 나타내고 있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내에서 이러한 자치구별 격차는 지역간 소외와 화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표 7> 상위5개 & 하위5개 자치구의 서열로짓결과

구분			주관적웰빙(행복지수)				
			건강상태	재정상태	주변인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
소득 수준	고 (高)	$\beta$ (S.E.)	.127***	.129***	.221***	.199***	.214***
		Pseudo $R^2$	0.0022	0.0017	0.0056	0.0045	0.0053
		N	10607				
	저 (低)	$\beta$ (S.E.)	.313***	.306***	.320***	.335***	.325***
		Pseudo $R^2$	0.015	0.015	0.017	0.019	0.017
		N	9016				

\*:p<0.1; \*\*:p<0.05; \*\*\*:p<0.001

<표 7>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높은 소득평균 5개와 낮은 소득평균 5개의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상위지역은 0.127, 하위지역은 0.313으로 나타났다. 약 0.19정도의 기울기가 차이가 났다. 이는 소득에 따라서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하위지역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지표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재정상태의 경우 상위지역은 0.129, 하위지역은 0.306으로; 주변인관계의 경우 상위지역은 0.221, 하위지역은 0.320으로; 가정생활의 경우 상위지역은 0.199, 하위지역은 0.335로; 사회생활의 경우 상위지역은 0.214, 하위지역은 0.325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최대 0.184의 차이에서 최소 0.111의 차이까지 높은지역과 낮은지역 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소득이 주는 주관적웰빙은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소득이 주는 주관적웰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에 부유국과 빈곤국을 비교검토한 선행연구(Stevenson & Wolfers, 2013)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표 8> 상위5위와 하위5위의 서열로짓결과(통제모형)

구분		주관적웰빙(행복지수)					
		건강상태	재정상태	주변인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	
고 (高)	소득수준	0.049**	0.082***	0.174***	0.158***	0.168***	
	성별(기준:남성)	-0.085**	0.161***	0.014	0.018	0.009	
	연령 (기준: 10대)	20대	-0.842***	-0.998***	-0.503***	-0.450***	-0.511***
		30대	-1.303***	-0.654***	-0.627***	-0.706***	-0.857***
		40대	-1.694***	-0.607***	-0.680***	-0.783***	-0.849***
		50대	-1.805***	-0.323**	-0.676***	-0.849***	-0.817***
		60대이상	-2.139***	-0.138***	-0.774***	-0.891***	-0.767***
	학력 (기준: 중졸)	고졸	0.700***	0.675***	0.318***	0.269**	0.409***
		대졸	0.849***	1.222***	0.510***	0.431***	0.641***
		대학원이상	1.198***	1.453***	0.886***	0.723***	1.099***
	혼인상태 (기준: 기혼)	미혼	-0.046***	-0.137*	-0.119	-0.447***	-0.179**
		이혼/별거	-0.283**	-0.993***	-0.408***	-0.867***	-0.157
		사별	-0.956***	-0.879***	-0.634***	-0.696***	-0.615***
	Pseudo $R^2$		0.0327	0.0177	0.0115	0.0113	0.0108
로그우도		-16793.5	-18480.3	-16138.3	-16456.1	-15959.2	
N		10607					
저 (低)	소득수준	0.199***	0.259***	0.256***	0.258***	0.243***	
	성별(기준:남성)	-0.111**	-0.005	-0.0031	0.084**	0.014	
	연령 (기준: 10대)	20대	-0.691***	-0.365**	-0.673***	-0.608***	-0.739***
		30대	-1.086***	-0.267**	-0.874***	-0.727***	-0.850***
		40대	-1.397***	-0.487***	-0.989***	-0.942***	-0.920***
		50대	-1.610***	-0.595***	-1.035***	-0.987***	-1.023***
		60대이상	-1.950***	-0.656***	-1.008***	-1.009***	-1.033***
	학력 (기준: 중졸이하)	고졸	0.419***	0.373***	0.377***	0.359***	0.389***
		대졸	0.530***	0.532***	0.619***	0.705***	0.686***
		대학원이상	0.270	-0.286	0.429**	0.797***	0.567**
	혼인상태 (기준: 기혼)	미혼	-0.100	-0.208**	-0.147**	-0.322***	-0.093
		이혼/별거	-0.070	-0.049	-0.182*	-0.310***	-0.234**
		사별	-0.514***	-0.005	-0.123	-0.335**	-0.285**
	Pseudo $R^2$		0.0408	0.0194	0.0228	0.026	0.025
로그우도		-15558.4	-17028.4	-15330.6	-15285.7	-15257.5	
N		9016					

\*:p<0.1; \*\*:p<0.05; \*\*\*:p<0.001

<표 8>는 개인인적사항을 통제한 뒤에 분석한 결과이다. 여전히 두 회귀모형의 소득수준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뿐만 아니라 모든 모형에서 소득평균이 낮은 지역이 소득변화당 주관적웰빙의 상승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구분하여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평균이 높은 지역을 살펴보면, 소득수준의 경우는 건강상태, 재정상태, 주변인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의 5개지표 모두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고, 정(+의)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인 관계는 주변인관계에서였고, 사회생활, 가정생활, 재정상태, 건강상태의 순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 0.1을 기준으로 할 때 주변인관계, 사회생활, 가정생활이 기준치를 넘었는데 다른 지표에 비해서 이 3가지의 경우 소득에 따라 충족되는 주관적 웰빙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건강상태나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수치가 낮았다. 연령의 경우 10대에 비해 다른 연령대 모두에서 주관적 웰빙이 낮은 것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학력의 경우는 중졸이하에 비해 다른 학력 수준들 모두에서 주관적 만족도가 높았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즉, 학력이 중졸이하 보다 높을 경우 더 행복하고 만족스럽다는 것이다. 혼인상태의 경우 기혼자에 비해 미혼, 이혼, 사별은 모두 주관적 웰빙 수준이 낮았으며, 이때 사별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배우자의 사별은 크나큰 슬픔과 상실감을 준다는 점에서 주관적 웰빙에 매우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모형 설명력은 건강상태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두었을 때 가장 높았으며(3.2%), 사회생활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두었을 때 가장 낮았다(1.08%).

소득평균이 낮은 지역을 살펴보면, 소득수준의 경우는 소득평균이 높은 지역과 동일하게 건강상태, 재정상태, 주변인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의 모두에서 통계적 유의성과 정(+의) 관계성을 확인하였다. 이때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인 관계는 재정상태관계에서였고, 가정생활, 사회생활, 건강상태의 순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 0.2를 기준으로 할 때 재정상태, 주변인관계, 사회생활, 가정생활이 기준치를 넘었으며, 건강상태만이 0.2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이 역시 0.2에 근접하고 있었다. 즉, 모든 지표들이 0.2수준에 접근하거나 상회하고 있었으며 각 지표들 모두 소득에 따라 주관적 웰빙이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령의 경우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10대에 비해 다른 연령대 모두에서 주관적 웰빙이 낮은 것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즉, 10대가 모든 연령대에 비해 행복하고 삶에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력의 경우는 중졸이하와 비교할 때 학력이 높은 경우 주관적 만족도가 높았으나, 고소득 지역과 달리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자는 건강상태와 재정상태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특히, 고소득지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학력에 의한 만족도 수준이 낮았다. 혼인상태의 경우 기혼자에 비해 미혼, 이혼, 사별은 모두 주관적 웰빙 수준이 낮았고, 사별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고소득지역에 비해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한 변수가 적었다. 이는 고소득지역에서는 배우자의 존재자체가 삶의 만족과 행복에 큰 관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저소득지역에서는 배우자의 존재가 주관적웰빙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저소득지역에서는 먹고사는 문제나 빈곤해결이 더 큰 삶의 이슈가 될 수 있고, 삶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고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 이러한 삶에 대한 가치추구는 삶의 여건(빈곤 vs. 부유)의 차이에 기인할 수 있다는 점을 통계결과 유추해볼 수 있다. 모형 설명력은 건강상태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두었을 때 가장 높았으며(4.08%), 재정상태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두었을 때 가장 낮았다(1.94%).

### 3. 결과 요약 및 가설의 검증

본 연구는 소득과 주관적 웰빙의 관계에 대한 국제비교연구를 지역연구에 접목시키고자 하였다. 이때 ‘소득수준이 빈곤한 지역이 부유한 지역에 비해 소득에 따라 충족되는 주관적웰빙의 수준은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1, ‘소득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웰빙이 충족되는 지점에서 주관적 웰빙지수의 비율은 감소할 것이다’라는 가설2, ‘주관적 웰빙에 대한 소득의 한계효용은 지역 내 구성원들의 상대적 소득격차와(ex: 소득편차)과 상관성이 있을 것이다’ 가설3 등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표 9> 연구가설의 검증

구분	연구가설	가설관계	기각여부
H1	소득수준과 주관적웰빙의 관계에서 하위5위 기율기는 상위5위 기율기에 비해 높음	(+)	기각되지 않음
H2	소득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웰빙이 충족되는 지점에서 수렴되는 주관적 웰빙 한계효용의 존재		기각되지 않음
H3	소득의 한계효용(수렴구간)과 구성원 소득격차(소득편차)	(+)	기각되지 않음

분석결과, 우선 상위5개지역 표본을 가지고 회귀분석한 결과와 하위5개지역 표본을 가지고 회귀분석한 결과 하위5위의 회귀계수가 높아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소득에 의한 주관적웰빙의 수준이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H1은 기각되지 않았다. 둘째,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소득구간을 증가를 분석한 결과 한계소득이 나타났으며, 소득의 한계효용을 확인할 수 있어 H2 역시 기각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웰빙은 상대적 소득격차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데 소득격차가 높은 것과 소득의 한계효용이 높은 것 사이에는 정(+)의 상관성

이 존재할 것이라는 H3 역시 기각되지 않았다. 즉, 본 연구가 국가비교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던 가설 3가지 모두 한 국가내의 지역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소득과 주관적 웰빙 사이의 논쟁은 지금까지도 진행중인 상황이기에 다른 대상으로의 적용과 검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많은 연구결과가 대부분 국가 단위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국가간 비교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온 바 이를 지역단위 또는 도시단위를 확대·적용함으로써 가설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상대적 소득차이가 절대적 소득 보다 주관적 웰빙에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은 다양한 수준과 차원에서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지역이나 국가가 가지고 있는 소득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주관적웰빙에 중요한 원인이라면 지역간 소득차가 심해지고 있는 오늘날 정책적 방안이 시급함에 대한 '경중'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몇 가지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소득누적분포와 주관적웰빙의 관계를 통해 서울시민의 주관적웰빙의 소득한계효용이 찾아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1인의 월소득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한계소득을 1년으로 환산하면 5400만원으로 확인되었다. 만일 2인가구로 이를 환산한다면 2인기준 1가구의 1억이 넘는 돈이 된다.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Kahneman & Deaton(2010)의 연구의 1인 연가구소득 75,000\$(U.S)과 비교할 때 이는 상당히 높은 금액이다. 하지만, 응답자가 1인에 대해 질의응답한 경우에도 이를 가구소득으로 확대 생각할 여지가 많다. 이에 단순히 소득에 배수를 적용하여 해석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다. 허나 그러한 해석에도 여전히 서울시민은 비교적 많은 소득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며, 만족도에 대한 소득의 효과가 상당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시에 한정하더라도 경제적 부가 여전히 고려되어야 할 요소임을 짐작케 한다.

둘째, 소득편차와 소득지점과의 상관관계 결과로 본 연구는 스피어만 상관관계를 통해 소득편차와 소득지점과의 상관계수를 도출할 수 있었다(0.409). 이러한 상관분석결과는 비교적 높은 관계성(Rea & Parker, 2005)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 내의 소득편차를 줄여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득격차가 심해진 곳에서 더 많은 소득을 얻으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소득편차가 높은 지역일수록 주관적 웰빙에서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득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에서 소득과 주관적웰빙의 회귀계수의 기울기

가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보고자 하였다<sup>10)</sup>. 분석결과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이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과 비교할 때 일관되게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즉, 부유한 지역에서 소득이 주는 주관적웰빙은 빈곤한 지역에서 소득이 주는 주관적웰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부유국과 빈곤국을 비교검토한 선행연구(Stevenson & Wolfers, 2013)를 지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서울시는 주관적 웰빙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연봉이 필요하고, 소득편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으며, 소득이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을 구분하여 정책 및 제도적 보완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결과가 2012년 횡단면적 자료에 의한 것이기에 더 많은 자료를 통해 확인될 필요가 있다. 허나 소득격차가 서울시 내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이 서울시민들의 주관적웰빙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지속되어야 하며, 미약하게나마 정책적 타당성은 본 연구결과로 뒷받침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10) 회귀계수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은 소득이 주관적웰빙에 주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 【참고문헌】

- 구교준·임재영·최슬기. (2014). 소득과 삶의 역량에 따른 행복 결정요인 연구. 『한국행정학보』, 48(2): 317-339.
- 기영화·김윤지·김남숙. (2013). 커뮤니티웰빙 연구를 위한 국제지표 분석: 한국적 함의의 도출, 22(1): 1-35.
- 이양호·지은주·권혁용. (2013). 불평등과 행복: 한국의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47(2): 25-43.
- Clark, A., & Oswald, A. (1998). Comparison-concave utility and following behaviour in social and economic setting.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0: 133-155. Clark, D. A. (2002). *Vision of Development: A Study of Human Values*. Northampton, MA: Edward Elgar.
- Diener, E., Sandvik, E., Seidlitz, L., & Diener, M. (1993).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subjective well-being: Relative or absolut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8: 195-223.
- Duesenberry, J. (1949). *Income, Saving, and the Theory of Consumer Behavio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Di Tella, RAfael, Robert J. MacCulloch, and Andrew J. Oswald. (2003). The Macroeconomics of Happines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5(4): 809-827.
- Easterlin, R.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In P. David & M. Reder (Eds.),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Essays in Honour of Moses Abramovitz*. New York: Academic Press.
- Easterlin, R. (2004). Diminishing Marginal Utility of Income?: Caveat Emptor. *Social Indicators Research*, 70: 243-255.
- Frey, Bruno S., and Alois Stutzer. (2002). What Can Economists Learn from Happiness Research?.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0: 402-435.
- Hirsch, F. (1977). *Social Limits to Growth*. London: Routledge.
- Inglehart, R.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e,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 Press.
- Inglehart, R. (2009). Democracy and happiness: What causes what? In A. Dutt, K. & B. Radcliff (Eds.), *Happiness, Economics, and Politics: Towards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Northampton, MA: Edward Elga.



- Kahneman, Daniel, & Angus Deaton. (2010). High income improves evaluation of life but not emotional well-being. *PNAS Early Edition*: 1-5.
- Rea, L. M., & Parker, R.A. (2005). *Designing & Conducting Survey Research A Comprehensive Guide* (3rd Edi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Stevenson, Betsey., & Justin Wolfers. (2013). Subjective Well-Being and Income: Is There Any Evidence of Sati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in May 2013: 1-16.
- Veblen, T. (1899). *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 New York: Prometheus Books.

**서 인 석:**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에서 2013년 “국회입법과정에서 정책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숭실대학교 SSK 커뮤니티웰빙 연구단에 재직 중이다. 2011년 한국행정학회에서 주관하는 Travel Grant 지원사업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 및 복지 분야의 정책분석, 정책평가, 연구방법론, 커뮤니티웰빙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정책유형과 정책대상집단에 따른 정책결정 소요시간 연구(한국행정학보, 2013)”, “정책명칭, 상징, 그리고 수용(한국행정학보, 2014)”, “지방행정서비스와 커뮤니티웰빙 구성요소 간 관계(한국행정연구, 2014)”, “커뮤니티웰빙 평가요소로서 지방행정서비스요인의 적합성 분석(지방행정연구, 2014)”, “서울시 패널자료를 활용한 커뮤니티웰빙 개념구조와 측정지표의 적합성 분석(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4)”, “커뮤니티웰빙의 다면적 주관적 인식 및 객관적 조건과 비교(지방행정연구, 2014)” 등 이외에 다수의 연구물을 학술저널에 게재하고 있다(inseok800414@naver.com).

**우 창 빈:** 성균관대학교에서 2012년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학위논문: Investigating Contextual Determinants of Happiness: with Reference to Seoul Citizens), 현재 숭실대학교 SSK 커뮤니티웰빙 연구단에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행복, 웰빙, 삶의 질에 대한 공공정책적 접근과 이의 한국사회와 국제사회에 대한 적용, 그리고 정책적 함의이며, 관련하여 “바람직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가 국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기술적(technical) 거버넌스가 민주주의보다 우선하는가?”(행정논총, 2014), “대안적 글로벌 개발협력의 이론 모색: 행복론의 이론적 근거와 정책적 함의”(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4), “Investigating Contextual Determinants of Happiness among Seoul Residents”(The 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2013),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정책은 가능한가? -행복을 목표로 하는 공공정책의 이론, 논란, 가능성과 조건들”(행정논총, 2013) 등이 있다(changbinwoo@gmail.com).

**기 영 화:**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Ph.D(논문: A Study of Adult Education Needs of Korean Americans: Barriers to Participation, 1993)를 취득하고 숭실대학교 평생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커뮤니티웰빙, 공무원HRD, 노인인력개발이며, 관련논문으로는 “지방행정서비스와 커뮤니티웰빙 구성요소 간 관계”(한국행정연구, 2014), “커뮤니티웰빙 이론개념 구성에 관한 연구(지방자치학회보, 2014)”, “An Analysis of the Relative Importance of Components in Measuring Community Wellbeing”(Social Indicators Research, 2014), “Sing, Dance, and Be Merry: The Key to Successful Urban Development?”(Asian Social Science, 2014), “Promoting Community Wellbeing: The Case for Lifelong Learning for Older Adults”(Adult Education Quarterly, 2014) 등이 있다.(key@ssu.ac.kr)